



첫 사장후보 공개설명회...3명으로 압축

사추위, 이선근·정일용·조성부 추천

“국민 품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돌려놓는 과정”



6일 본사 연우홀에서 연합뉴스 사장 처음으로 열린 사장 후보 공개 설명회에서 윤동영 연합뉴스 대기자(왼쪽부터), 정일용 연합뉴스 대기자, 이선근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조성부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간이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를 국민 앞에 당당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바로세우는 책무를 질 차기 사장 후보 3명이 정해졌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유숙열)는 6일 이선근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 정일용 연합뉴스 대기자, 조성부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간(가나다 순)을 선정해 뉴스통신진흥회에 추천했다.

연합뉴스 역사상 처음 열린 사장 후보 공개 설명회를 거친 결과다.

이날 설명회 무대에는 추천된 이들 3명 외에 윤동영 연합뉴스 대기자,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까지 모두 5명이 올랐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설명회가 진행되는 내내 연우홀에는 열기가 넘쳤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노조)와 회사에서 모집한 사원 대표 40명뿐 아니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이 리쿠르팅한 시민 참관인단 70여 명이 연우홀을 꽉 채웠다.

후보들이 연합뉴스를 이끌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 사추위가 추진 3가지 질의에 응답하는 동안 시민과 사원들은 메모지나 노트북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집중해 듣는 모습이였다.

유숙열 사추위위원장은 개회사와 폐회사에서 “이번 사추위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품에 연합뉴스를 돌려드리는 과정에 시민, 사원 대표 여러분이 앞으로도 감시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보 5명은 연합뉴스의 현안과 과제를 꼼꼼하게 공부한듯, 1인당 주어진 시간 15분이 부족할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의 발표를 했다. 편집권 독립 제도와 보도 공정성 확립 방안,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역할 강화 방안, 디지털 시대 미디어 대응방안, 합리적인 인사 구상, 과거 청산 방안, 노사 상생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전에 취합한 시민 질문을 바탕으로 사추위가 공통으로 제시한 3가지 질의에 후보들은 2분씩 시간을 받아 답변했다. 질의가 즉석에서 제시됐기에 한 후보는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지만 열심히 답변하겠다”고 말문을 열기도 했다.

노보는 그중 사추위 추천을 받은 3명이 발표한 정책(☞ 2,3면)과 질의응답(☞ 4면)을 상세하게 담았다. 차기 사장은 시민과 사원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로 진정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고 정책을 공정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록에 명백히 남은 대로 시민과 사원들이 연합뉴스 바로세우기의 실천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설명회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상당 부분 드러났으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적폐 청산 의지와 계획의 구체성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추상적인 원칙 확인과 화려한 계획, 언변 보다는 확고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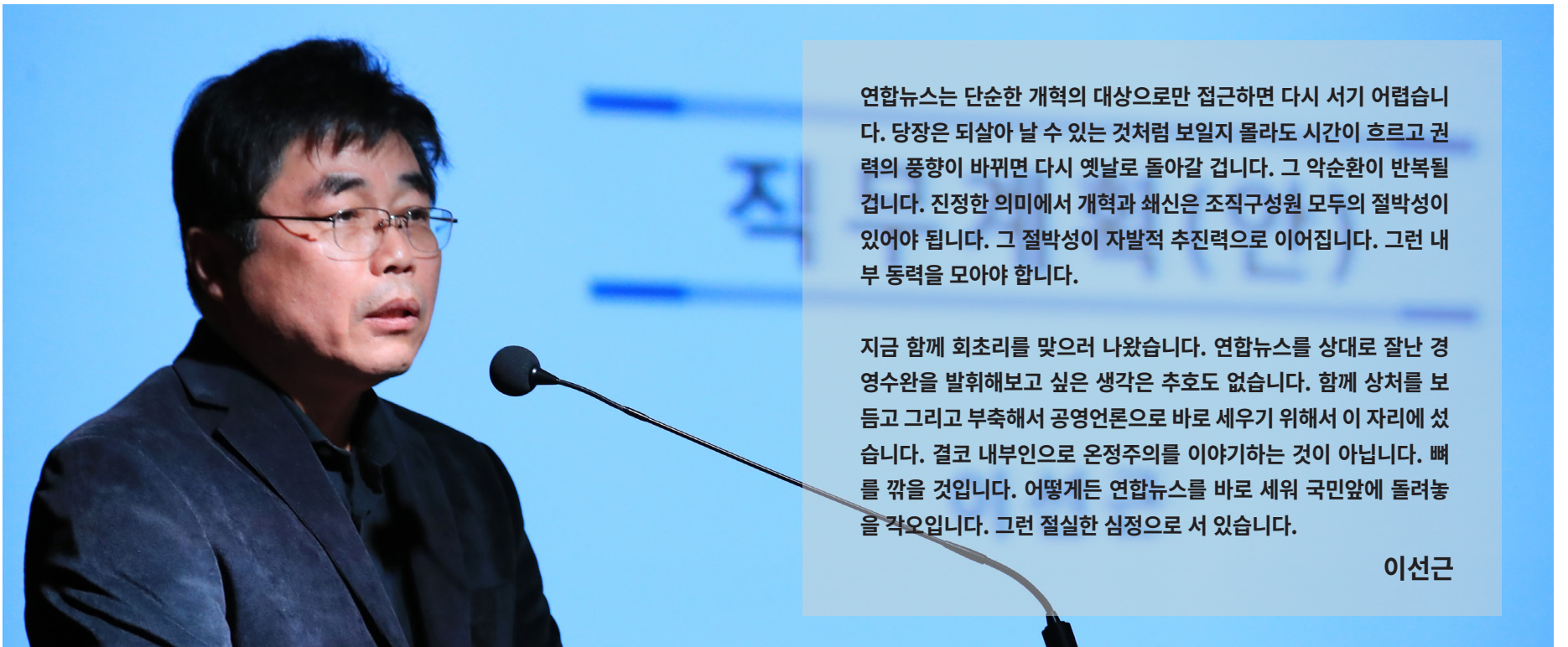
참관인단은 끝까지 설명회를 경청하고 나서 ▲참관 소감 ▲이사회가 사장 후보 최종면접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질문 ▲향후 연합뉴스가 가야 할 방향 등 3가지를 담은 의견서를 적어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리서치업체를 통해 진흥회에 넘겨졌다.

설명회는 회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중계됐다. 사원과 조합원들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삼삼오오 모여 각 후보 발표에 대한 자체 평가와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오는 8일 후보 3인에 대한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최종 후보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진흥회는 사장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시민참관단과 사원대표가 제시한 의견,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최적임자를 사장으로 최종 추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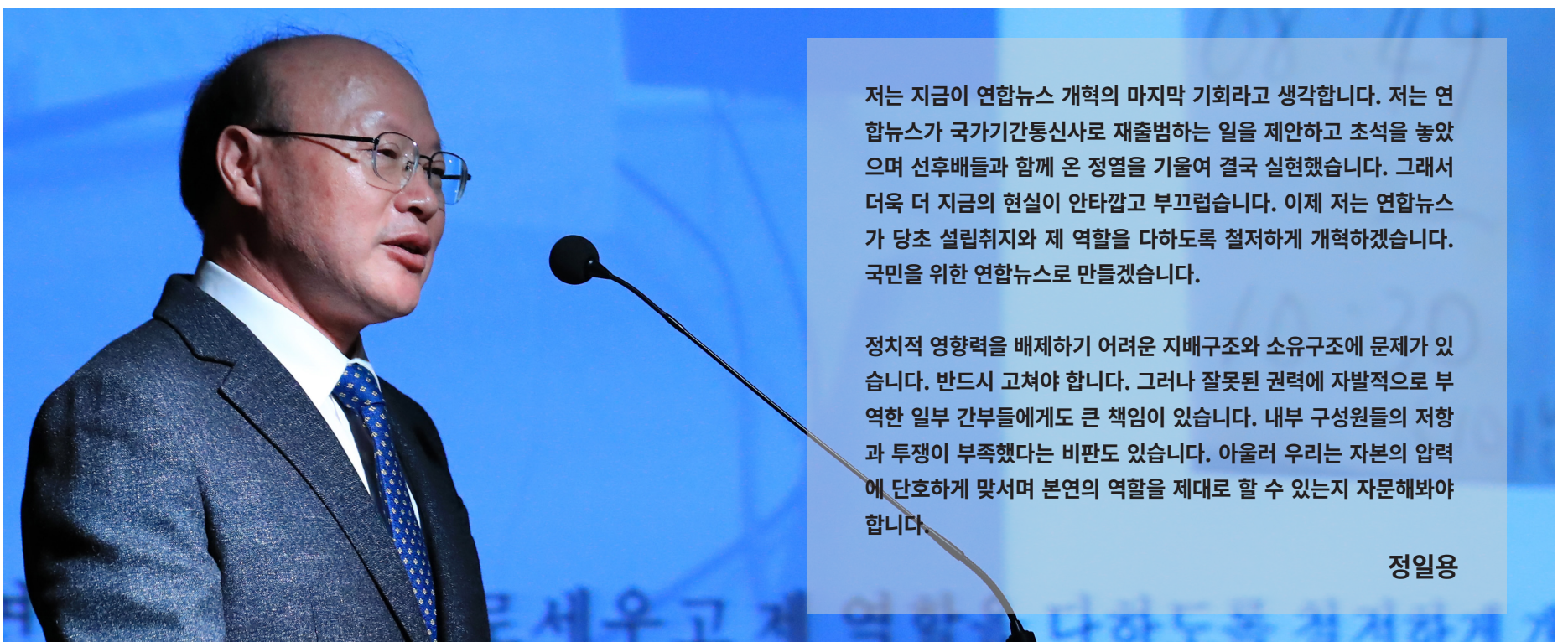
3인이 말한 '개혁'...구성원이 지켜본다



연합뉴스는 단순한 개혁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면 다시 서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되살아 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권력의 풍향이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과 쇄신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절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박성이 자발적 추진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내부 동력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함께 회초리를 맞으려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를 상대로 잘난 경영수완을 발휘해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함께 상처를 보듬고 그리고 부축해서 경영언론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코 내부인으로 온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연합뉴스를 바로 세워 국민앞에 돌려놓을 각오입니다. 그런 절실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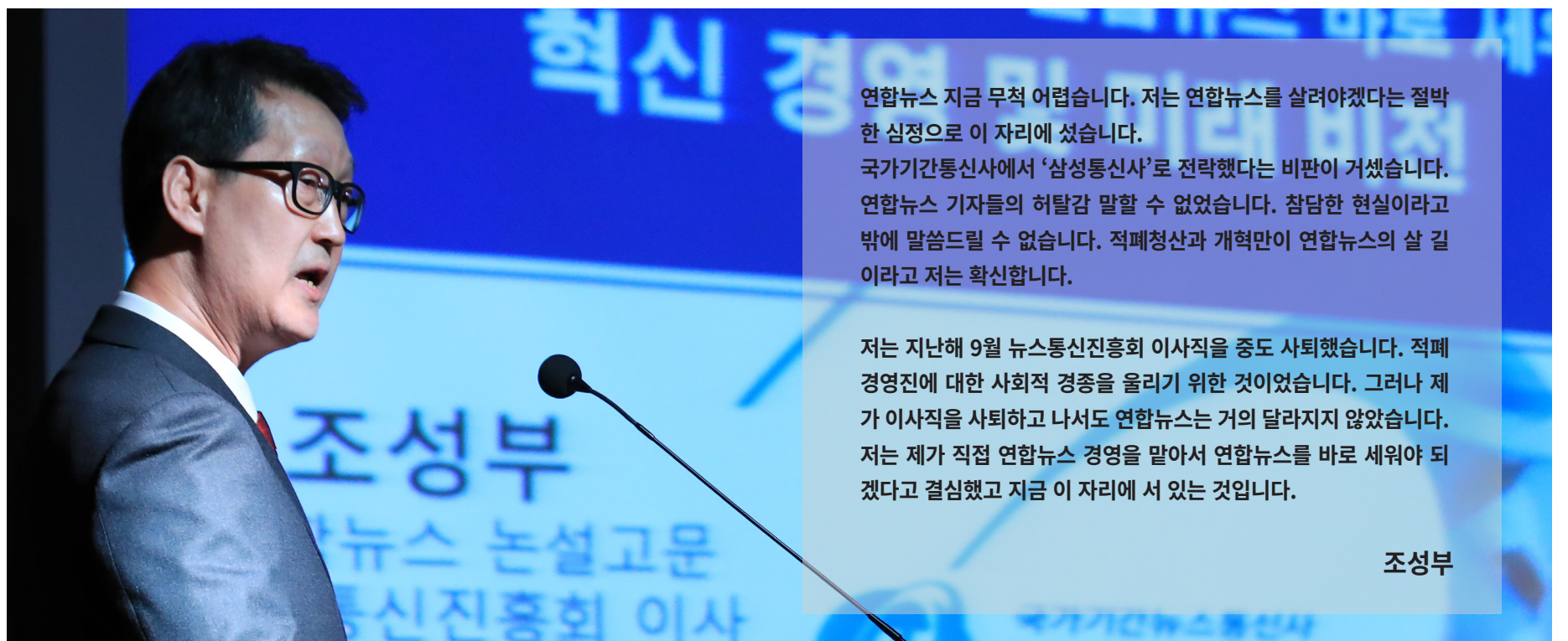
이선근



저는 지금이 연합뉴스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 재출범하는 일을 제안하고 초석을 놓았으며 선후배들과 함께 온 정열을 기울여 결국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는 연합뉴스가 당초 설립취지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연합뉴스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지배구조와 소유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에 자발적으로 부역한 일부 간부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과 투쟁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자본의 압력에 단호하게 맞서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정일용



연합뉴스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연합뉴스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기간통신사에서 '삼성통신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들의 허탈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담한 현실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만이 연합뉴스의 살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직을 중도 사퇴했습니다. 적폐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사직을 사퇴하고 나서도 연합뉴스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연합뉴스 경영을 맡아서 연합뉴스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결심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성부

"연합뉴스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이선근 후보

보도 관련사항

편집총국장제로 복귀하겠다. 편집총국장에게 인사 관여를 허용하겠다. 편집총국장이 공정보도를 위한 권한행사와 책임을 다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 심층취재 전담조직을 만들고 어젠다 에디터를 신설하겠다. 어젠다를 수평적 논의로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시간 팩트체크 조직을 도입하겠다. 작성단계부터 소관부서 데스크와 병렬로 작동하도록 하겠다. 오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순환인사에서 융통성을 뒤 각 부문에서 전문기자제를 확대하겠다.

통일관련뉴스는 특별히 중시하겠다. 민족뉴스국을 신설하거나 통일 에디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중국 국경 취재망도 강화하고 평양특파원도 가장 먼

저 추진하겠다. 통일문제연구소 설치도 검토해보겠다. 노사합동의 편집위원회와 수용자권익위원회 기능도 보강하겠다.

인사쇄신, 모든 것의 출발점

간부의 책임과 권한을 등한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적극적으로 공정보도를 저해한 경우나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가로막은 경우는 물론이다. ‘권한 위에서 잠깐 자’도 문제다.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인사로 조직이 분명한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다. 간부의 책임에 관한 사내인식의 기류를 바꿔 놓겠다.

동료, 상향평가를 반영하겠다. 평가를 경영진이 독점하는 것은 과거 수직적 위계질서의 산물이다.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상필벌에 따른 수시 인사를 하겠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직위를 이용해서 동료와 타인의 삶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연합뉴스TV/정부구독료/노사관계

연합뉴스TV의 공영성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공영정보장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연합뉴스와 상호 왕래를 넓혀 나가겠다. 정치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사회 각 부문을 비취주는 특색있는 공영적 프로그램을 간판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겠다.

정부 구독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또 다른 매체들과의 전재계약도 다시 들여다 보겠다. 수용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지방사와 외신사를 적극 유치해서 수송동 사옥을 국내 미디어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소통이 이뤄지는 노사관계 복원,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취재 및 근무 방식의 전면재편, 연봉제 호봉제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하겠다.

정일용 후보

개혁추진방법

가칭 ‘적폐청산 및 미래설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 지난 경영진 시절 불공정보도사례와 연합공공성과괴사례, 부당행위사례 등을 조사해 2-3개월 내 백서를 발간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편집총국장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 공정보도협의회 등 편집권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독자 제보 등을 담당하는 인력과 시민참여 담당 에디터를 신설하겠다.

기수와 연공서열에서 탈피해 전문적 능력과 특성·창의와 개혁성 위주 인사를 하겠다. 상향평가제와 동료평가 및 팀 실적 평가 등도 병행하겠다. 입사 후 7-10년 순환인사를 실시하고 이후 전문 분야를 선택하게 하겠다.

국제뉴스와 지역 전문성 있는 기사를 육성해 특파원으로 기용하고 특파원 내정자는 조기 선발하겠다. 한반도 관련 주요 지역 특파원은 외교, 남북문제 취재 경험을 미리 쌓도록 의무화하겠다. 스트링어 등 현지 인력을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추진하겠다.

콘텐츠 평가실을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까지 맡는 ‘콘텐츠 평가·연구·교육본부’ (가칭) 로 확대 개편하고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사에 반영하겠다.

콘텐츠 혁신과 강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동영상 융합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 유통에 힘을 쏟겠다. 나아가 AP나 로이터처럼 문자와 사진 만이 아니라 연합 3사가 생산하는 영상 콘텐츠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영상뉴스통신사’로 영역을 확장하겠다.

남북관계와 북한뉴스를 강화하겠다. 북한의 조선중

앙통신사와 교류를 확대하고 평양지국을 설치해 연합뉴스 기사를 상주시키겠다. 남북관계 뉴스부문과 외국어뉴스국 영문 북한뉴스를 복원하겠다. 북한포털을 보강하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겠다. 북한 및 한반도 뉴스, 한류, 한국경제 분야에서 외국어뉴스콘텐츠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및 다문화뉴스도 강화하겠다.

연합 4사 협업강조/차별철폐/인권 전담관

연합 4사의 협업 강조를 위해 계열사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콘텐츠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 중요 이슈 취재 및 대형기획취재를 공동 추진하겠다.

합리적 차이는 인정하되 부당한 차별은 철폐하는 원칙하에 복잡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

젠더 및 인권 문제를 관할하고 상담하는 남녀 전담관을 두겠다.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고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재정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라고 생각한다.

조성부 후보

콘텐츠의 신뢰회복

편집총국장제와 편집총국장 임명동의제를 부활시켜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 나가겠다.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의 원칙으로 인사를 단행하겠으며 전문성, 소통 능력 갖춘 인재를 발탁해 연고와 패거리 정서를 완벽하게 배제한 인사를 제도화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하겠다. 비리를 근절하고 제도적인, 법적인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기동타격대와 같은 추적보도팀을 만들겠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키우고 전문기자제로 깊이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연합뉴스 콘텐츠의 3대축인 북한, 국제(외국어뉴스) 지방뉴스를 강화하겠다. 북한부를 부활하고 평양

상주 특파원 제도를 추진하겠다. 동북아센터를 ‘동북아평화연구소’(가칭)로 확대 개편하겠다.

특파원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문뉴스 서비스를 강화해 글로벌 영문뉴스에이전시로 연합뉴스를 키우겠다.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지방뉴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포럼을 만들어 지역 뉴스의 어젠다를 주도해 나가겠다.

언론 지형 개혁의 선도자

연합뉴스는 적폐청산과 개혁의 견인차 되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팩트체크팀을 만들겠다. 언론사간의 대화를 상설하고 지방 언론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 연합뉴스 TV를 개혁해 신속, 공정, 객관적 보도로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내외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아시아판 CNN’으로 육성하겠다.

차별제거/건설적 노사관계/미래비전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회사 공동체를 구현하겠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성임원을 기용하는 등 남녀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성추행을 엄단하겠다. 다른 요인보다 인성과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소통으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조를 회사 운영의 한 축으로 삼겠다.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정통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이는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에 따라 텍스트 중심의 언론사에서 동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허브로 만들겠다.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연합뉴스 혁신위원회를 가동해 6개월 내 ‘혁신보고서’를 내고 전사적인 통합을 달성하겠다.

위원장 편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함께합시다.

연합뉴스 구성원과 함께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추진할 차기 사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선근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 정일용 연합뉴스 대기자, 조성부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간(가나다순), 이 중 한 명이 8일 차기 사장으로 내정됩니다.

노조는 앞서 사장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최종 후보가 선정될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끝까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장 후보들의 연합뉴스 개혁 의지와 정책, 비전을 엄밀히 평가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사장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6일 사장후보 공개 설명회를 보면서 3년 전 사추위의 밀실논의 끝에 나온 ‘김성수, 박노황, 박호근’이란 결과에 절망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때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물론 이내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장선임에 공개 검증과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변화가 시작됐음이 분명하지만 진짜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풀 때가 아니라 다잡을 때입니다.

사장후보들은 저마다 편집권 독립, 보도 공정성 제고, 공적 역할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복원, 공정·투명한 인사 등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요? 저 일들을 과연 사장이 인사권과 경영권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연합뉴스의 개혁과 변화를 담보해 낼 수 있겠습니까?

연합뉴스의 진정한 변화는 경영진만으로도, 구성원만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후보들이 설명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로 개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일단 한쪽의 변화 가능성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이들이 약속을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끝까지 고삐를 풀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고 스스로 변화를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조가 중심을 잡고 앞장서겠습니다.

연합뉴스가 국민 앞에 당당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바로 설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남북보도·미디어환경...시민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1.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정부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

40년 가까운 기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안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가치를 얼마나 뒤서 쓸지 등 가치판단이었다. 제도적 장치는 다 만들 수 있다. 기자들이 무엇이 공정한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성찰해야 하고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에는 편집총국장제, 공정보도위원회, 편집위원회, 수용자권익위 등 많은 장치와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것이 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사람, 특히 리더십의 문제다. 리더부터 간부들까지 마련된 장치를 철저하게 지키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기본이다. 보도 공정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뉴스통신진흥법 제5조에 의해 의무로 정해진 것이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된다.

2. 남북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는 다변적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어떤 방향성 있어야 하나?

남북문제는 우리 문제다. 우리 시각으로 판단해서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 남북의 장래를 위해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그 노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옵션이 미국, 중국의 옵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 보도에서 가장 문제는 저널리즘의 원칙 중 원칙인 사실보도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아야 한다. 평양지국 개설도 사실보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민간교류 침범은 언론 분야가 말아야 한다.

연합뉴스는 정권 안보 위해 뛰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생각해야 하는 통신사다. 한반도 정세 흐름을 볼 때 연합뉴스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보도도 그런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하면 된다.

3. 디지털시대 언론사가 생존 위기에 있다. 포털뉴스가 강화되는 시기에 연합뉴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현재 환경에서 어떻게 상생할지, 연합뉴스는 공적 미디어로서 어떻게 하고 사적 미디어는 어떤 역할 하도록 유도해나갈지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 연합뉴스는 디지털 격차 해소하고 정보주권 수호하는 소프트파워 전쟁의 첨병에 서있다. 그것을 충실히 하면 된다.

매체 융합시대로 통신사의 기존 방식이 맞지 않게 됐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정보 복지, 즉 알권리 충족으로 정보격차 해소하는 데 연합뉴스가 앞장서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정보주권을 수호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연합뉴스에도 포털뉴스는 양날의 칼과 같다. 알권리 충족 차원에선 포털에 기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으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책무 수행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연합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언론사간 대화해 상생과 합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